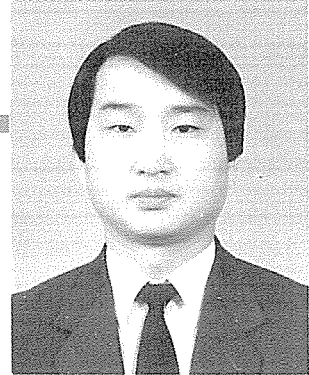


기획
특집 V

부지 확보와 지역지원사업

趙炳熙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이해부족이 가장 큰 장애 지역이기주의 없어야

反原電운동 88년부터

한국에서의 반원자력운동은 1988년을 전후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산발적인 원전반대운동으로 시발되었으나 본격적인 반원자력운동은 1989년초 경상북도 동해안 영덕군 일원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치반대 운동이 효시를 이루며 이어져 일년후 안면도 사태로 이어진다. 이 글은 영덕지역의 반원자력운동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가 실패하게 된 원인과 주민들의 반원자력운동의 성격을 분석해보고 대책을 생각해보기 위한 것이다. 영덕지역의 경우 처분장 부지확보가 어려웠던 이유는 주민들의 반원자력인식, 지역단체의 성공적인 반대운동의 조직화, 그리고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세가지 요소는 당시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요소와 결부되어 반원자력운동의 확산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주민들의 반원자력 인식〉 한국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역사적 조건들은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같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원폭피해를 입었던 한국인들이 아직 경상도 일원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거나, 최근 들어 체르노빌의 원전사고와 북한의 핵문제 등의 여러 요인들은 원자력을 이용한 질병치료, 전력생산, 과학실험 등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원자력을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1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은(표본수=627) 원자력에 대하여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원자폭탄, 기형아, 암 등을 연상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으로 처분장 역시 불안정하며 방사능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인체에 피해를 미칠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처분장 예정지역 주민의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일반국민들의 인식보다 그 강도가 훨씬 높았다. 이러한 주민들의 인식은 처분장 시설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원자력 전문가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다.

전문용어 이해어려워

많은 지역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신들은 원자력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여러 전문용어나 이론과 설명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자신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바로 핵에 대한 공포나 그로 인한 생존기반의 상실에 대한 우려라는 것이다. 원자력 전문가들이 핵폐기물 처분장이나 원전주변에서 일년 동안 감지되는 방사능의 양이 병원에서 X-RAY 가슴사진 한장 찍는 것보다 적은 양이라는 사실을 주장해도 주민들은 그와 같은 안전성 주장은 큰 관심이 없고 부정적인 측면만 확대하여 인식하고 있다. 면접조사 결과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했는가 하는 질문에 44.3%의 응답자만이 동의를 했다. 이것은 원자력으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는 질문에 92.5%의 주민이 동의한 것과는 매우 대비된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식부족을 감추고 싶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달리 보면 주민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원자력에 대한 과학적 설명

이 아니라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핵에 대한 공포가 앞서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어떻게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극단적 공포 문제확대

영덕주민들도 1989년의 처분장 부지 선정이 있기 이전까지는 다른 지역 주민의 인식과 비슷하게 원자력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이나 극단적인 공포 어느 것도 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처분장문제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이를 생업 내지는 생존기반과 연결시키며 원자력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은 흔히 이야기되는 「지역이기주의」 적인 측면도 관련된다. 즉 처분장은 필요하겠지만 내고장에 설치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지역이기주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자 「합리적인」 이유가 개제된다. 주민들은 처분장이 설사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하여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단지 영덕주민만이 갖는 것은 아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갖기 때문에 처분장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영덕 등 동해안 지역은 관광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별다른 자원이나 공업기반이 없어 청정해역과 해산물에 기반한 관광산업을 통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려 하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처분장이 설치되어 관광객이 영덕을 찾지않게 되고 외지인들이 영덕산 농수산물을 먹지않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강하게 하였다. 이들은 「인체에 전혀 피해가 없는 공동묘지 부근에도 사람들은 가지않으려 하

는데 하물며 인체에 해가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핵폐기장 근처에 가겠는가?」라고 비유했다. 즉 주민들의 반대의 근거에는 생활터전의 상실에 대한 강한 불안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민들간에 반원자력 인식이 급속하게 확산된 배경에는 농촌공동체적 특성도 작용하였다. 반핵의 신념을 가진 소수의 지도자들은 원자력 관련시설들이 과학적으로도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에게는 반핵논리가 원자력 전문가의 설명이나 마찬가지로 충분히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왜 반대운동지도자들의 설명이 상대적으로 주민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주민들의 향토에 대한 애착심이 개재되어 있다. 농촌지역은 아직도 공동체적인 규범과 가치가 많이 남아 있고 고향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긍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장의 설치가 단지 당대의 사회경제적 피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자손손 그 영향이 미친다고 할 때 주민들이 반대하게 될 것은 당연하다. 주민들은 처분장이 설치되면 상당히 넓은 지역이 수용될 것이고 따라서 그 지역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반대운동지도자들의 말은 주민들과는 사회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먼 곳에서 사는 정부관리나 원자력 전문가들의 말보다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반대운동의 조직화〉 사회운동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자원이 있어야 한다. 자원은 경제적 자원뿐만이 아니라 지식과 전략, 운동방법론 등 비물질적인 요소들도 포함된다. 대체로 군청소재지에 거주하며, 젊고, 교육수준이 높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발적 조직체들이 반대

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정보, 그리고 경제적 자원을 근거로 지역여론을 주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무대가 농촌이라는 점도 반대운동의 성공적 조직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개인주의적이고 익명성이 강한 도시와는 달리 농촌에는 각종 회(會)가 존재하고 있고 새로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조직이 형성되어 대부분 주민의 동의하에 행동으로 쉽게 실행되고 있다.

공동체적 질서강화

공동체적 질서가 강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러한 집단적인 모임에 대하여 개인적인 반대나 불참을 표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이것이 비교적 수월하게 군중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조직의 지도자들은 분산된 개인의 주장보다 조직이 위력을 갖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쉽게 조직을 결성할 수 있는 지역사정을 잘 활용하고 있다. 또한 629선언 이전과 달리 이러한 자생 조직에 대한 지방행정관서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자생 조직의 활동이 짧은 시간내에 다수의 인원을 규합하여 자신들의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반대운동지도자들은 조사목적을 이해하고 협조한 반면 오히려 군청이나 경찰서 관계자들이 주민동요를 이유로 조사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어 조사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것은 지방행정 당국이 과거처럼 주민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의 발생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주민들은 반대운동조직의 처분장 설치 반대에 대해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었으나 그 동의 이유는 계층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일반주민

은 핵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고 여론주도층의 반대이유에 동조하는 정도였다.

일반인 막연한 불안감 커

그러나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핵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나 주로 환경보호론자들의 주장만을 이야기했다. 이들은 그 지역에서 상업에 종사하며 안정된 생활여건을 갖고 있었다.

횃집이나 관개통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의 생활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처분장이 설치될 때 야기될 불이익에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몇몇 일반주민들은 반대운동지도자들의 이러한 점을 솔직하게 지적했다. 물론 앞서 지적한 것처럼 반대운동지도자들은 애향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성원들이었고 따라서 고향을 지키자는 정서적 요인이 반대운동에 나서게 한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지역주민보다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사회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력이 많은 이들 계층은 상대적으로 일반주민보다 민감하게 처분장문제에 대처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 사회운동을 발생시키는 구조적인 불만이나 조직적 자원이 있다 하여도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논리나 접근방식이 이보다 우월하면 사회운동은 성공하기 힘들다. 처분장 문제에 대하여 상황을 악화시킨 요인중의 하나가 관계당국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점이다. 애당초 처분장 설치를 위한 지질조사를 하던 조사원들이 주민들에게 조사목적을 허위로 얘기한 사실과 도지사나 군수가 주민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했었던 사실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관계당국이 주민들에 대

하여 행정비밀주의나 임시방편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은 오히려 주민들의 감정을 악화시킨 결과를 빚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처분장 설치를 너무 쉽게 생각한 데 있다.

과거 유신시대나 5공화국 시절에 전문가들이 입지 선정을 하게 되면 정부가 지방정부나 주민들과 별다른 협의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발전소를 지을 수 있었던 시절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점이 간과되었다. 또한 농촌지역의 사회구조적 특성상 부지선정 작업 이전에 적어도 지방관서에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들이 대주민설득에 나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수나 도지사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반대운동이 시작된 이후 원자력연구소에서는 행정기관장과 반대운동지도자 및 주민에 대한 사업설명과 홍보를 시도하였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지역사회의 자생조직에 대한 지방행정관서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반대운동에 지방관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지역사정에 어두운 중앙정부(과학기술처와 원자력연구소)가 주민들과 직접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것은 처분장 부지확보 문제에서 정부 부처간에(특히 내무부와 과기처간에) 충분한 협력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않고 계획을 쉽게 포기한 점도 그 이후 다른 지역에서의 부지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정부 확고한 의지 중요

〈대책〉 부지확보 실패의 경험에서 앞으로 정부가 처분장 부지확보를 추진하

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정부가 부지선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는 일이다. 주민이 반대한다고 계속 백지화하면 어느 곳에도 세우기 힘들 것이다. 처분장 부지확보가 일개부처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에 걸맞게 유관부서들의 유기적인 협력하에 정책이 마련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처분장 시설의 안전성을 주민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이 부지확보의 관건이겠지만 단지 홍보를 통한 태도변화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처분장의 설치가 지역의 발전에 확실하게 도움이 될 지역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주민들이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상당한 정도 해소하기 전에는 지역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주민들은 안전성 문제 이상으로 지역지원사업 등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하여도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의 제시가 필요하며 그것이 단순한 유인책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될 것이라는 점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주민에 대한 설득과 협의는 단계적으로 그러나 지속적으로도 끈기있게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공직자와 정치인, 그리고 지역단체 간부들에게 상세한 사업설명을 하고 협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주민의 지식정도와 생활방식에 걸맞는 홍보자료를 만들어 다수의 주민을 상대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국민전체에게 자주 알려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의견을 제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閔 英 基 <경희대교수/천문학, 본지편집위원>

1978년 경남 고리(古里)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상업발전을 시작한 이래 울진 2호기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는 모두 9기에 이른다. 원자력에 의한 발전량도 총 발전용량의 절반을 넘어섰다. 앞으로 2006년까지 건설 예정인 원자력발전소는 모두 18기에 이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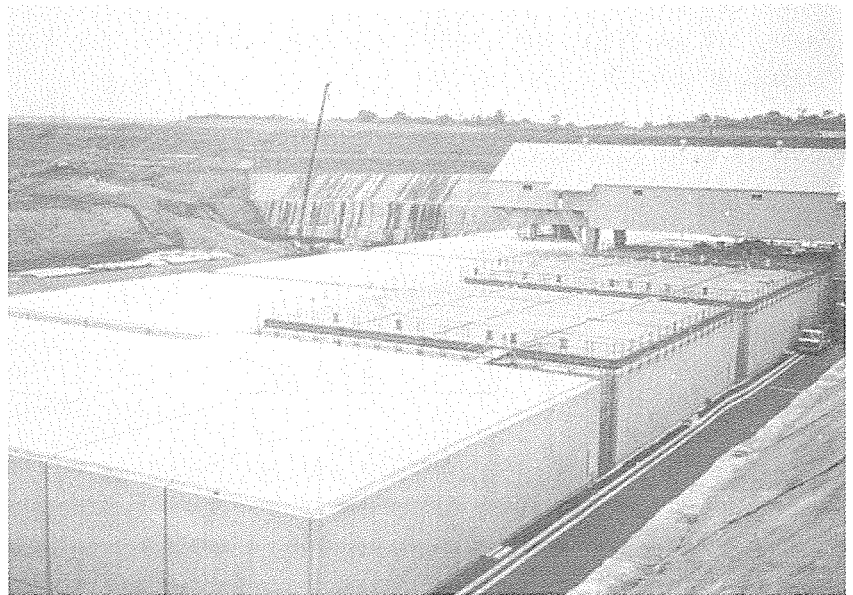
원자력발전소 수가 늘어나면서 그곳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의 양도 엄청나다.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선 유출정도에 따라 고준위와 중·저준위로 구분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이미 사용된 핵연료와 같은 것으로 이를 재처리하면 플루토늄과 같은 새로운 핵연료를 추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물질은 원전(原電)의 물탱크 속에 저장되어 있는데 현재 저장된 총량은 1천8백40톤에 이르고 있다.

중·저준위폐기물은 발전소에서 사용되어 방사능에 오염된 작업복, 장갑, 덧신, 공구 등이다. 이 폐기물들은 소각하거나 압축된 후 시멘트에 혼합되어 강철 드럼에 넣어 밀봉되고 있다. 영구저장소를 찾지 못해서 각 원전내 창고에 임시 저장된 이같은 폐

기물의 총량은 현재 3만8천드럼에 이른다고 한다.

원전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중·저

정부와 국민 서로 信賴바탕 처리장 임원가족 현지 同居



◇일본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로카쇼무라)

준위폐기물의 양은 점점 늘어나서 이제 더 이상 창고에 보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영구적인 처리장을 시급하게 찾아내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이같은 혐오물질의 처리장을 찾는

문제가 쉬운 일은 아니다. 후보지부근 주민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정부의 당면 과제로 남아있다. 몇년전 안면도가 후보지로 선정되었다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백지화된 일을 상기할 필요도 없이 말이다.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문제도 사회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은 것이 이땅에 쌓이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장을 찾는 문제가

다. 이땅 어디엔가에는 이 원치않는 물질이 묻혀야 한다. 그러나 집단이기주의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이러한 물질을 자기 고향에 가져다 놓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핵하면 누구나 우선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요즘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국의 핵실험 등 대중매체를 통한 핵에 대한 혐오감이 더해 가고 있다. 원자력발전이 안전하다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구소련의 체르노빌이나 미국의 트리마일의 방사능 누출사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나 설득이 피부에 와 닿지 않게 만들어 놓았다.

얼마전에 돌아본 일본, 프랑스, 영국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들은 오랫동안 가졌던 나의 관점을 어느 정도 바꾸게 만들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처리장이 삭막하거나 주민과 격리된 지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농사짓고 목장을 일구는 조용한 전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이었다. 일본은 북해도와 인접한 작은 도시인 미사와시에 로카쇼무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시설을 한참 건설중에 있었는데, 총 7백40만㎡ 면적에 3백만드럼(60만㎡)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

프랑스에는 서쪽 해안가에 라하그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고·중·저준위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이곳 60만㎡의 중·저준위폐기물이 묻힌 장소는 이미 초원이 조성되어 전원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있었다.

영국의 만체스터 북쪽 3백km에 위치한 드릭처분장은 이미 1백만㎡의 폐기물이 묻혀 있는데, 그곳도 초원이 조성되고 있었으며 근처에서 소들이 한가로이 거니는 모습이 여느 농촌과 다를 바 없었다. 이들 선진국의 처리장도 건설 초기에는 주민과의 마찰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와의 차이점은 그들에게는 적어도 국민이 믿는 정부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부를 믿어보라고 했고 또 믿음을 실천에 옮겼으리라. 그래서 그런지 수십년을 운영해 오면서 어느 곳에서도 사고가 한건도 없었다고 한다.

처리장 시설이 들어선 곳들의 주민에 대한 배려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복지시설의 건설, 취직알선, 기업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최신 시설을 갖춘 홍보관의 운영, 방사능 감시망의 시민 참여등을 실천하고 있었고, 주민의 신뢰감을 쌓기 위해서 처리장의 임원과 가족이 현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들이다.

영국의 처리장이 주는 교훈

金 明 子 <숙명여대 교수/화학, 본지운영자문위원>

1914년, 영국의 웰즈(H.G.Wells)는 「해방된 세계」 속에서 원자탄으로 잿더미가 된 세상으로부터 핵융합의 실용화에 의해 에너지 궁핍에서 해방되는 인간사회를 그려냈다.

미국으로 망명하여 당초 원폭 개발에 앞장섰던 질라드(L.Szilard)는 웰즈의 소설로부터 영감을 받아 연쇄반응을 떠올

린다. 「기술과 과학행정의 곡예」라는 「맨하탄 프로젝트」는 군부·정부·대학·기업·연구소 등 과학기술주체를 총망라한 사상최대규모의 협동작업에 의해 시종 불확실성 투성이 속에서 드디어 기대를 넘는 성과를 올려 원자탄을 출현시킨다.

바로 그것은 눈으로 볼 수조차 없

는 「원자」라는 알갱이 속에 온 세상을 잿더미화할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이 숨어있음을 깨닫게 된 외경과 신비의 충격적 인간경험이었다. 원자력의 이중성 -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지구라는 행성을 파멸시킬 수 있는 무기인가 하면 전대미문의 막대한 에너지원이라는 극단적 두 이미지는 사람들을 혼란시킴으로써, 문화사적으로 인간은 원자력에 대해 일종의 분열적 증세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일까, 원자력에 대해서는 과학의 어느 주제에서보다도 과장 또는 왜곡된 에피소드들이 사람들을 심란케 하는 반면, 과학적·논리적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아니, 원자력은 어쩌면 현대과학기술의 폐해를 대표하는 속죄

양의 이미지에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 듯 하다. 어쨌거나 원자력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국민 이해사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한 것이 특징이며, 작금의 우리 상황도 그 때

사하는 바 크다. 요컨대 원자력정책의 선진성일진대, 전반적으로 그들은 매머드프로젝트인 원자력의 정책수립·수행·감독이 잘 돌아가게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조화시킨 합리적 조직

년의 사고로 이미지 쇄신의 안간힘 끝에 윈드스케일로 개명되었다가 도로 셀라필드로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다시 1983년 해안으로의 사소한(?) 방사능 오염사고로 인해 셀라필드는 시민들로부터 폐쇄압력까지 받는 급박한 상황에 몰린다.

비상사태를 맞아 철저한 궁리끝에 그들이 선택한 길은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알리는 정보공개 정책」이었다. 그리하여 80년대의 세심한 전략과 행동지침의 결과 셀라필드는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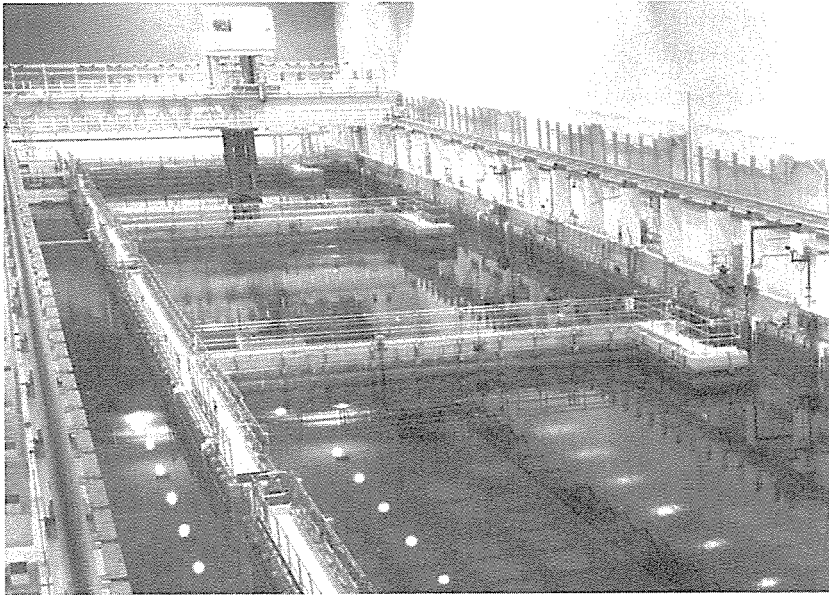
셀라필드에서 만난 홍보센터의 매니저는 과학·철학·문학·역사 등 모든 분야에 해박한 지성(知性)이었고, 그의 탁월한 식견과 교양은 원자력산업이라는 미묘한 분야에서의 이들 인력의 역할을 돋보이게 했다.

그는 『원자력이 이상적 대안은 아니나 잘 운영 관리하는한 현재로서는 에너지의 제1대안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셀라필드의 교훈은 우리에게 과학기술 정책 수행의 원동력이 국민의 신뢰라는 진리를 일깨우는 듯하다.

한국의 경우, 그간의 이른바 밀실행정이 쌓은 불신의 벽을 어떻게 허물고 지역주민의 피해의식의 늪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난중지난(難中之難)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실마리는 결국 서로를 믿어주고 믿을 수 있게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로써 재출발하는데서 찾을 수 밖에 없지 않을까.

모든 사실을 정직하게 공표 '제1代案' 스스로 믿게 유도



◇영국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셀라필드)

문에 심한 홍역을 앓고 있는 형국이다.

1957년 미국의 쉘핑포트 발전소에서 상업발전이 시작된 이래, 원자력발전은 나라마다 시기마다 그 접근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여왔다. 그중 원자력산업의 복합시설(고중저준위폐기물처리에서부터 각종 핵연료 생산, 사용 핵연료의 재처리 등)로서 모델 케이스격에 드는 영국의 셀라필드(Sellafield) 주변시설의 운영관리는 우리에게 시

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 주변은 관광명소로서 때로는 썰소가, 때로는 양떼가 한가로이 풀을 뜯는 초원이 펼쳐지는가 하면, 저쪽편의 해변도 한폭의 명화를 연상케 하여, 마치 지상낙원을 방불케 한다. 동네 사람들은 그곳을 일터로 삼아 활기차게 일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시행착오는 있었다.

원래 1950년대 영국의 원자력 군사연구의 전초기지였던 셀라필드는 1969